

이슈 리포트

12

2003년 10월 첫째주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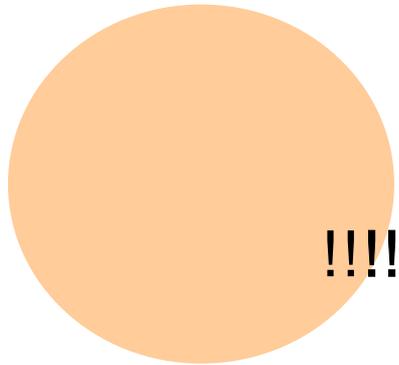
- 세상돋보기:	환율정책
- 노동자 세상:	청와대 초청(?)
- 통신정책:	불평등한 접속료
- 정자동 6층에서:	노사관계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가



☞ 이번주 주식시장 종합주가지수는 697.40으로 마감하여 두달여만에 700선 아래로 밀려났다. 문제는 이의 배경이 환율급락에 있고 옆친데 덮친 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하지 할까봐 많은 불안과 우려를 갖게한다. 실제 미달러 환율은 3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미 달러화가 약세이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종합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또 경제에 치명타를 준다는 것일까? 자칫 어려운 경제이야기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리고 내친 김에 미 달러화 약세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달러화가 약화되면 무슨 변화가 생기나?

달러화는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로서 경제를 지탱해가는 한국에게 있어 달러화가 미치는 한국경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수출이 그나마 한국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화 약세 충격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클 수 있다.

달러화가 약화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한국 원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국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데 왜 문제인가?

1달러에 1200원하다가 1달러에 1100원으로 달러화가 떨어질 경우, 수출하던 기업들은 앉아서 달러당 100원을 손해 보게 된다.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판매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 수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어 판매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증시가 폭락하게 된다.

2. 달러화가 약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금번 달러화 약세의 직접적 배경으로 9월 2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을 거론하고 있다.

재무장관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아시아 경제권 국가에게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일본 엔화가치가 급등하고 중국위안화도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재무장관회담 성명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미국의 저달러 정책이다.

미국은 부시집권이후 무역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미국 정부는 저달러 정책을 유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저달러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이 확대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미국 무역경상수지 적자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저달러 정책이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아시아국가인 중국과 일본, 한국을 그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특히 그 주요 타겟은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도리어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반응을 하지 않고, 또한 환율제도가 일본, 한국의 변동환율제(시장 변화에 따라 환율이 변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정환율제이기에 금번 환율에서 크게 피해를 입지않았다. 그러자 미국은 곧 관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복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최근에 집중적인 저달러 정책을 쓰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시의 재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처방을 사용하여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3.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은 저달러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요 대미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 보복관세, 수입규제의 WTO제소 등 양자간 및 국제기구를

통해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럴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수출 시장을 미국에서 유럽, 아시아 국가로 다변화해나가고, 외화보유고를 확대하여 환율변동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횡포를 극복할 수 있는 자주적 경제 구축이 근본의 해결임은 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저러나 부시의 재선을 위해 우리나라 민중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수많은 민중들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천지신명께 내년 미 선거에서 부시가 떨어지도록 빌어야 하나...



“

,

가?”

- 내가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면, 나는? -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6일 한국노총의 이남순 위원장과 김성태 사무총장등 지도부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현정부의 노동정책 협조와 경제 살리기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이남순 위원장 등은 주5일제 후속조치로서 임금보전,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체신노동자 비정규직 문제, 전력민영화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용자 쪽으로 기울었다는 노동계의 오해를 씻고 경제 살리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단병호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도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단병호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철도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투쟁에 공권력 투입한 노무현 정권을 만나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노동계의 만남이 노동자의 입장을 들어주기 보다는 친미적이고 친자본적인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기에 자칫 들러리에 불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용자와 투쟁도 하고 교섭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이다. 노동자의 요구를 갖고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할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와 국민연금 제도개선, 그리고 정부의 사용자 대항권에 맞서

3대 요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연히 민주노총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한번 만나면서 뭘 얻을려고 하거나 혹은 갑자기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에게(그리고 국민에게) 정당한 노동자의 요구를 제기하고,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민주노총은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국민의 지지를 얻고 투쟁을 통해 요구를 관철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을 거부하겠습니까? 아니면 만나겠습니까?

<다음은 판단을 돕기위해 신문기사를 옮겼음.>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 간부들을 만났다.

노 대통령은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과 김성태 사무총장·산별 위원장 등 32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겸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 회생을 위한 노동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인정받는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노동계의 이해와 협조를 각별히 당부했다. 핵심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신(新) 노사관계 모델을 이끌어내고,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다.

이날 면담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법안 통과와 ‘신노사관계 로드맵’ 발표 등으로 ‘노(盧)·노(勞) 관계’가 불편해진 뒤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회동이 청와대측이 한국노총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노 대통령이 노동계와의 관계 복원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양측은 불편한 관계에서의 첫 만남치고는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중략)

이남순 위원장은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토대로 균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중략)

윤태영 대변인은 “노동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원칙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노총, 공공노조 등 노동계와의 대화 자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9월 26일. 경향신문. 박래용 기자



· , ·

- SK텔레콤 수천억 이익, KT는 조단위 손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중에 흥미로운 사실이 언론에 발표되었다. 유무선 업체간 접속료 불균형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접속료 산정은 KT가 공기업이었을 경우 초기 투자비가 많은 무선통신업을 보호·육성하기위해 무선에 이익이 되도록 결정되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KT가 민영화 되었고 또 유선업체는 사양화되어 수익이 줄고, 또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변화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개선 되어야 할 정책이다. 회사의 정책적 활동과 여론화 작업이 적극 전개되어야 하며, 노동조합도 단지 KT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평성에 근거하여 정당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과제이다. 연합뉴스기자 글의 내용을 퍼온 내용이다.

SK텔레콤이 유.무선 사업자간의 접속료 정산을 통해 연간 4천억 ~ 7천억의 수익을 올리는 데 비해 KT는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는등 유.무선, 선후발 업체간 접속료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2년의 경우 다른 유.무선사업자와 접속료를 정산한 결과 6천405억원을 지급한 반면 1조 1천137억원을 받아 4천73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SK텔레콤은 또 지난 2001년에는 6천96억원을 지급하고 1조3천185억원을 받아 7천89억원, 2000년에는 4천694억원을 지급하고 1조1천305억원을 받아 6천611억원의 이익을 냈다. 반면 KT는 2002년에 1조2천163억원을 접속료로 지불하고 3천542억원만을 접속료수입으로 받아 8천62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KT는 또 2001년에는 1조5천464억원을 지급하고 3천200억원만을 받아 1조2천264억원, 2000년에는 1조6천260억원을 지급하고 2천964억원을 받아 1조3천296억원의 손실을 냈다. 접속료란 유선전화 가입자와 이동전화 가입자간(LM:Land to Mobile 또는 ML) 또는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가입자(LL 또는 MM)들이 서로 전화를 주고 받을 때 정통부가 정한 개별원가를 기준으로 사업자들이 다른 회사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서로주고 받는 요금을 말한다.

지난 2002년의 경우 정통부가 정한 SK텔레콤의 접속료는 분당 1.0원이었던데 비해 KT는 분당 14.89원이어서 두 회사에서 발생하는 통화량이 같다고 가정하면 KT는 SK텔레콤에 분당 26.11원의 손해를 보게된다.

정통부의 이같은 접속료 구도속에서 후발업체들도 2002년의 경우 KTF는 3천877억원, LG텔레콤은 1천8백29억원의 이익을 올렸으며 하나로통신은 613억원의 손해를보았다. 이에 따라 현재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유선업체는 물론 이동통신 후발업체들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접속료 산정 기준을 고쳐줄 것을 정통부에 강력히요구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접속료 수입이 한 때 1조원을 넘어선 때도 있으나 점차 수입액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 3월 접속료 기준을 다시 산정할 때 유.무선 사업자들에 형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6층에서

“

”

☞ 2003년 단체교섭이 조합원 94%의 찬성으로 맺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진함을 느끼고 있었다. 관례적으로 하던 쟁의를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극적으로 맺음 되었기에 실감이 안나는 것일까? 우연히 신문에서 한국 도요타자동차 사장의 강연관련 기사를 보면서 미진함의 원인과 향후의 희망을 확인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에서 최소한의 근거로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일관되게 외부의 시각 특히 투자자들의 시각을 이유로 들면서 무책임, 무소신으로 일관했었는데...

한 단어 하나 하나가 마음에 와 닿는 표현들이며,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책임감도 느끼게 한다.

오기소 이치로 한국도요타자동차 사장은 2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50년 무분규 역사를 자랑하는 도요타의 노사문화를 설명하면서 “경영진의 꾸준한 노력 없이는 안정적 노사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며 노사관계에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오기소 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노사관계 개선 책임의 75%가 사용자 몫이라는 닉 라일리 지엠대우차 사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경영진이 노사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과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도요타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비결을 묻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도요타 수준의 상호신뢰에 이를 수 있는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으며 작지만 꾸준한 노력을 쌓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회사의 수익을 재투자와 노조복지에만 활용한다면 주주의 불만은 어떡하느냐”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오기소 사장은 “우선적으로 직원의 만족을 고려하지 않으면 회사경영이 성공하기 힘들다”며 “주주들도 직원들의 전적인 협력이 없으면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주의 동의와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오기소 사장은 지난 1977년 도요타에 입사해 26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한국에 부임했다. 9월 27일 한겨레 신문. 김정수 기자

만

화

방

